

납 세 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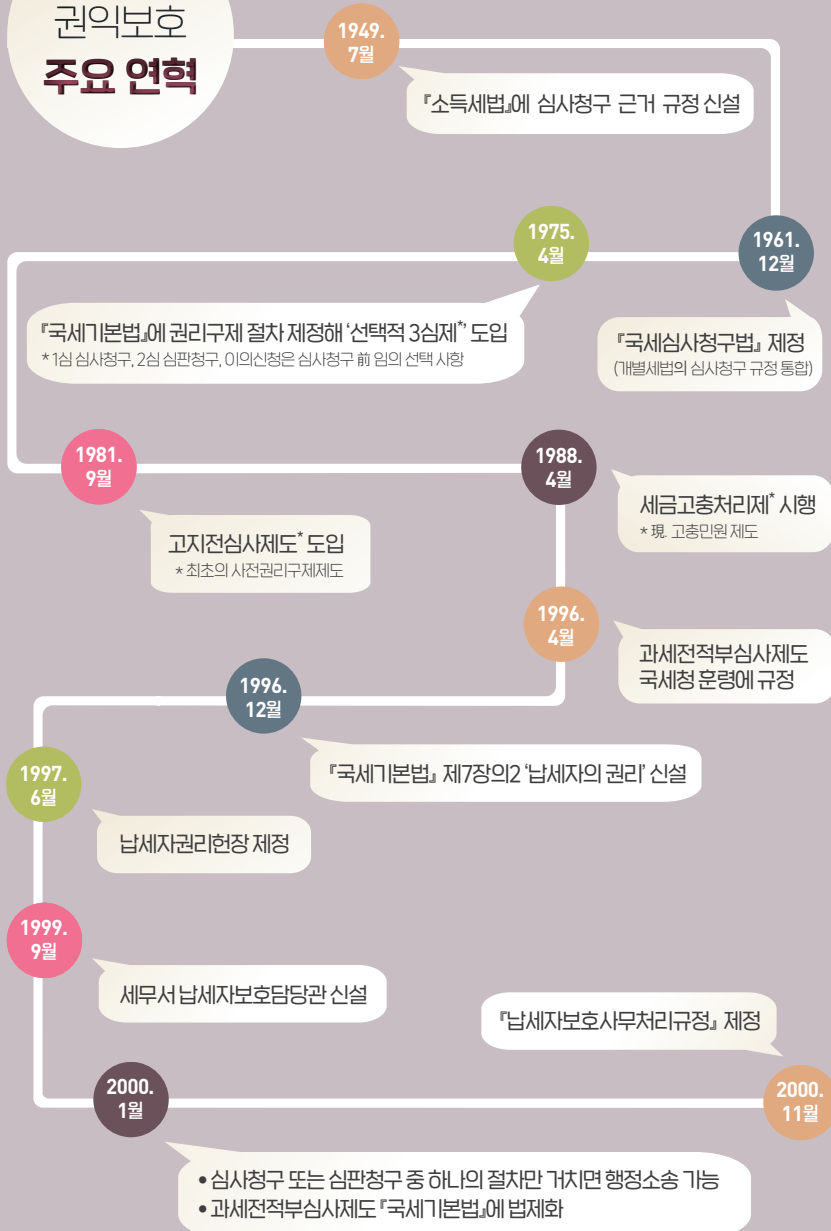
그 한길을 향한 기록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 세 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

납세자 권익보호 주요 연혁



2005.
9월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2008.
5월

지방청·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2009.
8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신설

2008.
12월

세무조사 등의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제도 법제화

2009.
10월

권리보호요청제도 도입

2010.
1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보장,
자격·직무·권한 등 법제화

2014.
1월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

2014.
3월

불복청구 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 2015. 1. '국선대리인' 제도로 법제화

2018.
4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과세예고통지를 『국세기본법』에 명문화

2020.
1월

2018.
12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심사청구에 한함)

Contents

발간사

6

1 편 납세자 권리 선언과 제도 변천사

- 1. 납세자 권리 선언(납세자권리헌장) 11
- 2.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변천사 19

2 편 분야별 변화

제1장 납세자 권리보호

- 1. 납세자 권리보호 기구 41
 - 1. 납세자보호(담당)관 41
 - 2. 납세자보호위원회 52
- 2.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62
 - 1.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62
 - 2.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73
 - 3.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80
 - 4. 세무조사 입회 제도 83
 - 5. 조사팀 교체 명령 제도 87
 - 6.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90
 - 7.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 93
- 3. 일반행정에 대한 권리보호 102
 - 1. 고충민원 102
 - 2.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115

제2장 조세불복 시 권리구제

- 1. 권리구제 개요 125
-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36
- 3. 이의신청 146
- 4. 심사청구 154

5.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행정서비스	164
1. 국세심사위원회	164
2. 국선대리인	173
3. 납세자의 절차 참여권	180
4. 결정서 공개	187
5. 비대면 국세심사행정서비스	189

제3장 납세행정서비스

1. 성실납세 우대	200
1.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	200
2.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 제도	207
3. 세금포인트 제도	213
2. 납세자 소통	222
1. 공감소통	222
2. 민생지원소통추진단	228
3. 영세납세자지원단	234
4. Voice Of Customer(VOC, 국민신문고)	240
3. 민원서비스	248
1. 개요	248
2. 국세 민원증명	249
3. 사업자등록	260
4. 상가건물 임차인 권리보호	265

3편 조직 현황

1. 국세청 납세자보호 조직의 변천	274
2. 납세자보호 분야 종사 직원 인원 현황	277
3. 역대 납세자보호관	278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짧은 글, 긴 생각

박 훈 납세자보호관	36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60
이재락 납세자보호관	100	김석환 납세자보호관	122
김수경 납세자보호담당관	162	이영준 납세자보호담당관	196
이하철 납세자보호담당관	220	김명도 납세자보호실장	246
송경선 납세자보호실장	270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시작된 납세자 권익보호는 납세자 권리의식이 점차 신장됨에 따라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납세자가 요구하는 실체적·절차적 권리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1. 3.

국세청장 김 대 지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걸음 앞을 기록

납세자 권리선언과 제도 변천사

1

납세자 권익보호 백서

납세자 권리 선언과 제도 변천사

1. 납세자 권리 선언(납세자권리헌장)

2.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변천사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제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 세 청 장

1. 납세자 권리 선언(납세자권리헌장)

가. 도입 배경

1997년 6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당시 국세행정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보다는 납세의무를 강조하였다. 즉,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지위가 과세관청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납세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당시 선진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선언, 납세자권리헌장을 발표하는 등 과세관청이 먼저 납세자의 권리 보장에 주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납세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경과(연혁)

1) 납세자권리헌장 제정(1997. 6. 30. 고시)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7장의²⁾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

1) 『국세기본법』 제7장의2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제81조의2에서 제81조의9까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

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법 제81조의2에서는 국세청장이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최초의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위해 1997년 1월 24일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법조계·납세자단체·세무대리인 등 외부위원 5인과 본청 국장 5인의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11인으로 구성된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청 사무관 이상으로 편성된 실무 작업반(12명)을 두어 제정위원회를 보좌하게 하였다.

제정위원회는 재정경제원, 조세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회 의견과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실무 작업반이 마련한 헌장 시안을 심의·확정하여 1997년 6월 30일에 고시하였다.

이어 1997년 7월 1일 국세청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에서 일제히 선포식을 하고 납세자 310여만 명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등 선진국형 세정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7. 7. 1. 납세자권리헌장 선포

최초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전문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이 선언·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된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 1997. 7. 1. 납세자권리헌장 전문 >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국세공무원은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기술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본문 제1항에서는 모든 납세자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제4항은 과세 정보에 대한 납세자 비밀 보호를, 제5항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제6항은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즉시 구제받을 권리를, 제7항은 국세공무원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각각 명시하였다.

2) 납세자권리헌장 1차 (일부) 개정(2007. 3. 2. 고시)

200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중 세무조사의 연기 신청과 관련하여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통지받을 권리 등 일부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2006. 12. 30. 법률 제 8139호)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2007년 3월 3일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시행하게 되었다.

1차 개정 시 추가된 내용은 조사 연기 신청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사전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이다.

1차 개정 이후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해 주도록 2014년 1월 1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2014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